

동서고속철 100억·제2경춘국도 2억

도 내년 국비 5조3천억 확보

도가 내년도에 최대 5조3,000억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당초 목표액 5조2,000억원을 1,000억원 가까이 상회한 액수다. 하지만 올해 6조572억원보다는 7,500억원여 줄어듦에 3년 연속 이어지던 국비 6조원 시대를 마감했다.

내년도 신규 SOC 사업은 국회 예산 조정소위에서 막판 사전타당성조사평가비 2억원이 반영된 제2경춘국도가 유일하다. 제2경춘국도는 2021년부터 진행되는 정부 국도 5개년 계획에 우선순위의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필요한 예산 형태로 확정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기획재정부와 총 사업비 협의를 진행 중인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는 내년도에 기본설계비 100억원이 반영됐다. 올해 65억원을 비롯, 기본설계비 165억원을 모두 확보해 목표한 2024년 완공을 향해 순항을 시작했다.

올림픽 경기장 시설 관련 예산은 개폐회식장이 있는 올림픽플라자 유산화 사업비 일부만 반영됐다. 도는 74억원을 요청했으나 이 중 58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피드스케이팅, 아이스하키, 슬라이딩센터, 스키점프 등 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활용 예산은 조건부로 추후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체육계를 중심으로

올림픽 시설 유산화 74억원 중 58억원만 반영

내년 예산안 잠정 합의 - 공무원 9,475명 증원

가등 중인 사후활용 태크스포스(TF)가 연말까지 최종방안을 마련하면 예산 등의 지원 방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내년도 당초예산 반영이 무산됨에 따라 문체부 기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도 차선택으로 검토되고 있다.

여야가 4일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지원, 소득세·법인세 개정안 등에 합의하면서 내년 예산안은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다만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안 합의는 유보했다. 공무원 증원

과 관련해 정부 원안인 1만2,221명에서 다소 줄어든 9,475명 수준으로 절충했다.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707억원으로 결정했다.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 안을 유지하는 대신 법인세는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을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성현·홍현표기자



명현종합건설 올림픽 후원금 전달 명현종합건설(대표: 송문숙)은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 100만원을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 전달했다.

긴급진단

건설업 실태조사, 이대로 좋은가

상위 50대 건설사 중 21곳의 실질자본금이 법정기준(5억~12억 원)에 못 미친다는 이유 등으로 실태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번에 수천억원짜리 공사를 따내고, 국제기준에 따라 매년 회계감사를 받는 대형 건설사들의 재무제표까지 다시 들춰보는 저인망식 실태조사에 대해 전문가들은 행정 낭비이자, 기업 부담만 키운다고 비판한다.



‘페이퍼컴퍼니’ 걸러낸다더니...

먼지털기식 과도한 잣대 탄탄한 중대형사 잡는다

4월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지난 10월부터 이달 말까지 3개월간 '건설업 부실·불법업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3편

국토부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키스콘)을 통해 자본금과 기술자 등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와 등록종대여, 기술자 중복배치 등 불법 의심업체를 각각 선별해 실태조사명단을 작성했다.

올해 조사대상은 종합건설업 4101개, 전문건설업 1만3290개 등 총 1만7391개사다. 지난해(9636개사)와 비교하면 무려 80%(7755개)나 늘었다. 예년과 다른 점은 탄탄한 중·대형 종합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조사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이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50개사 중 21곳이 실태조사를 받았고, 이 중 14곳은 법정자본금 미달이 의심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10대 건설사 가운데 상장사 2곳이 자본금 미달로 실태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ENR지가 선정한 세계 50대 건설사에도 포함된 A사의 경우 시가총액 2조원대, 매출 10조원대 규모다. 이 회사 관계자는 "실질자본금의 인정범위에 대한 정

50대사 중 14곳 '실질자본금 미달' 기준 논란
조사대상도 80% 늘어... 정상 기업마저 부담
전문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부·기업 간 견해 차이 때문"이라며 "소명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 회사 말고도 자본금 미달 의심 종합건설사는 3692곳이나 된다. 전문건설업체까지 합치면 총 1만4405곳이다.

국토부는 이 중 상당수 업체가 실질자본금 기준을 못 맞춘 것으로 보고 있다. 실질자본금은 최초 건설업 등록 시 납입자본금이 아니라 실자산에서 실질부채를 뺀 금액이다. 자산이 아

무리 많다고 부채가 많으면 기준에 미달된다. 일부 대형사들이 조사명단에 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해당 건설사는 실질자본금 보유 여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외부 회계사를 통해 재무관리상 태 진단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하거나, 자체적으로 문제 가된 자본내역에 대해 일일이 소명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진단보고서는 회사 규모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비용이 든다.

등록기준 미달업체로 확정되면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수주도 먹고사는 건설사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시장에서 탈락한 중·대형 건설사까지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실태조사는 페이퍼컴퍼니처럼 실제없는 건설사를 걸러내는 용도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kth@

실태조사·등록기준, 기업 현실 맞게 재정비해야

‘규제 줄이기’로 도입해놓고... 주기적신고 때보다 더 족쇄

역설적이지만 건설업 실태조사는 국토교통 분야 규제 줄이기의 결과물이다.

내년 초 폐지를 앞둔 주기적 신고제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실태조사다. 건설업체는 3년마다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재무제표 등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기업진단을 위해선 최소 100만원 안팎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의 행정부담을 줄이겠다고 내년 2월4일부터는 연 1회 이상 등록기준 미달의심업체만 따로 뽑아 조사하는 실태조사만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정상 건설사들은 더 이상 등록기준 충족을 입증하느라 애쓸 필요가 없어진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까다로운 실질자본 개념과 행정편의적 제도 운용 탓에 정상 기업들까지 해마다 실태조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주기적 신고제 시절엔 3년 단위로 받던 조사가 1년 단위로 주기가 되려 짧아졌다.

조사대상도 확대됐다. 올해 조사대상은 총 1만7391개사로 지난해보다 80%나 늘었다. 서울 소재 건설사의 경우 신생업체와 주기적 신고업체를 빼면 2곳 중 1곳꼴로 실태조사를 받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

자는 “불필요한 기업의 행정부담을 덜어 주겠다더니 빈도도 높고 강도도 더 세졌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실태조사가 재무진단 등 회계사 발발이 용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내년에 실태조사가 전면 시행되면 건설사들은 곡소리가, 회계사들은 웃음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며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면서 “대체 누구를 위한 실태조사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태조사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아울러 실태조사의 기반이 되는 건설업 등록기준도 현실에 맞게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등록단계에선 통장의 잔고보다 담보 등 재정능력 위주로 보고, 운용(실태조사)단계에선 임차료 보증 등 시장의 기존 시스템을 통해 걸러내는 투 트랙 전략을 쓰자는 것이다.

최민수 건설연 선임연구원은 “많은 현장을 운영 중인 건설사까지 자본금 미달로 자주 규제하는 대신 신용등급 등 보완시스템으로 기업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실태조사는 건설사의 실제 여부를 검증하는 도구로만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11월 건설 체감경기 악화... CBSI 전월보다 1.3p 하락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과 시중금리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면서 건설기업들의 체감경기가 다시 악화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1월 건

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보다 1.3포인트 하락한 78.2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82 부동산 대책과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감축 등으로 급락했던 CBSI

가 9월과 10월에 두 달 연속 소폭의 통계적 반등을 보인 뒤 11월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한 것이다.

박철한 건설연 부연구위원은 “4개월 연속 70선에 머문 것은 3년4개월 만에 처음”이라며 “건설경기가 점차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건설사는 한우물만?... 新성장 투자막는 '실질자본금의 덫'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 뺀 금액)

건설업 실태조사는 좋은 취지의 제도가 잘못 운용될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세계 50대 건설사에도 한순간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에 비해 실제 운용은 산업 현실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

건설업을 하려면 법이 정한 자본금 이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상시 보유해야 한다. 둘 중 하나라도 종합건설업체 등록기준인 5억~12억원에 미달하면 부적격이다. 이 경우 영업정지는 기본이고 개선이 안 되면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다. 최소 자본금 기준을 뒤서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차단하려는 이유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받은 대형사들은 이 가운데 실질자본금이 기준치를 밑돈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번에 수백억~수천억원의 수주하는 건설사들이 수억원의 자본금조차 못 맞추는 이유는 뭘까. 비밀은 '실질자본금'에 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관리규정과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건설업자 실태조사규정을 근거로 두고 있다. 실질자본이란 개념도 건설사들의 자본 건전성을 살펴보기 위해 따로 만든 용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한민국, 그것도 건설업에만 있는 독특하고 이상한 개념"이라고 꼬집었다.

실질자본금은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

수천억원 프로젝트 수주하는 대형사가 수억원의 자본금 기준을 못 맞추는 까닭은? 실질자본금 '뺄셈 계산법' 탓

건설 외 겸업, 투자, 유·무형... 자산에서 빼는 항목도 많고 부채로 넣는 항목은 더 많아

현실 반영 못한 기형적 기준에 정작 속아내야 할 부실업체는 형식적 자본금 갖춰 버젓이 영업

를 뺀 금액이다. 문제는 자산에선 빼는 항목이 많고 부채는 넣는 항목이 많다는 점이다. 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한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는 참고사항일 뿐이다.

기업진단지침에선 자산과 관련된 규정은 대부분 원칙적으로 부실자산(또는 겸업자산)으로 처리한다. 각종 뺄셈을 통해 실질자본을 줄여가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뺄셈이 겸업자산이다. 임대자산과 비상장주식, 회원권, 제3자에 대한 대여금은 건설업 외의 사업활동(겸업사업)으로 간주한다.

이중태 대성회계법인 공인회계사는 "유

가증권과 대여금, 선급금 등은 원칙적으로 부실자산으로 보고 예외적인 경우만 실질자산으로 인정한다"며 "특히 현금(전도금 포함)은 총액의 1%를 빼고 모두 부실자산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과거 부실업체로 판명된 건설사의 사례를 통해 부실자산 항목과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유가증권과 가지급금, 선급금, 보증금은 70%까지, 현금과 예금,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은 40%까지 무조건 부실자산으로 간주해 실질자산 항목에서 뺀다.

국도부 관계자는 "부실업체 조사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실태조사 대상업체 선정 때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뺄셈 계산법'은 수주를 속성으로 하는 건설산업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최민수 건설연 선임연구위원은 "대형사는 수조원짜리 해외 프로젝트에서 일부 손실이 나면 일순간 실질자본금이 기준치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며 "활발하게 활동 중인 기업이 프로젝트에 따라 손실이 날 때마다 단속하듯이 실태조사를 벌이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고

말했다.

실제 해외사업 비중이 90%에 달하는 B사는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대형건설업체인 C사 관계자는 "건설사의 실질자본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보면 하나 하나는 타당해보이지만 전체를 합쳐 놓으면 기이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상위 50대 건설사 중 14곳이 자본금 미달로 실태조사를 받게 된 것도 이런 메커니즘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작 속아내야 할 페이퍼컴퍼니는 실태조사를 비껴간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실제 현상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는 서류만 보면 실질자본금을 가장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실태조사에만 머물지 않고 건설기업의 경영방식까지 영향을 미친다. 건설사들을 '건설업'만 파는 우물안 개구리로 만들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긴 안목을 갖고 기업을 키우려면 투자 자산, 유·무형 자산을 늘려야 하는데 이게 다 부실자산으로 빠지니 투자를 할 수 없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을 이젠 갈아입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태형기자 kth@

社說

부실 건설사 실태조사 현실성 떨어진다

부실 건설사를 속아내기 위해 도입된 건설업 실태조사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업체들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특히 부실위험업체를 선별해서 한다. 부실 건설사를 거르기 위한 실태조사는 필요하다. 건전한 시장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부실 건설사 실태조사 대상업체 선정방식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점이다. 대표적인게 50대 건설사 중 21개사가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된 점이다. 이중 14곳은 자본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꼽혔다. 이들 업체는 한 번에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한다. 이런 업체들이 자본금 수십억원이 없어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 한마디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비현실적인 실태조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실질자본금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대상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실질자본금은 자본에서 부채를 빼는 방식이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부채나 부실자산이 많으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현장에서 활발히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단지 실질자본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시장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처사로 볼 수 있다. 단지 회계상으로 실질자본금이 없으면 무조건 조사대상에 포함시킨다.

게다가 현금성 자산은 무조건 40%를 깎고 가지급금, 보증금 등은 70%를 자산에서 삭감한다. 임대자산과 겸업자산은 아예 자산으로 인정도 안 한다. 이러한 상위 5개 건설사도 대상에 포함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정부는 겸업자산 등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건설사들의 사업범위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이윤배반도 이런 이윤배반이 없다.

정부는 건설사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주기적 신고제를 폐지하고 실태조사를 도입했다. 그렇지만 오히려 건설사들의 부담만 더 키우고 있다. 건설사들에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뿐이다. 이참에 부실 건설사 실태조사 선별대상을 현실적으로 바꾸고 등록기준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